



제2차 유럽 정상회의 개최 후 유럽 재정위기 해결책 발표

이정환 선임연구원

- EU는 10월 23일 유로존(17개국) 정상회의를 열고 유럽 재정위기를 둘러싼 주요 쟁점들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10월 26일 27개국 정상회의에서 최종안을 결정하기로 함.
 - 26일 회동은 당초 유로권 17개국 정상들만 모임 예정이었으나, 위기 해결을 위해 리스본 협정¹⁾ 손질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시되면서 27개 전회원국이 참석하는 확대 회담으로 성격이 바뀜.
- 제2차 정상회의 후 내놓을 대책이 시장의 불안을 확실하게 잠재울 수 있을지는 현재로선 불투명함.
 -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획기적인 조치를 기대하지 말라는 뜻을 여러 차례 내비침.
 - EU도 아직 구체적인 협상 진행상황을 공표하고 있지 않음.
- 제2차 정상회의까지 민간은행 자본 확충, 그리스 국채 손실을 조정,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확대, 재정통합과 규제 강화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민간은행 자본 확충의 경우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의 국채가 위험해질 것에 대비해 은행의 핵심자기 자본비율(core capital tier one)을 9%로 높이는 방안이 논의 중임.
 - 은행에 추가로 투입해야 할 자본의 규모는 1,070억~1,080억 유로로 추정됨.
 - 은행들은 일단 스스로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야 하며, 어려울 경우 정부가 공적자금으로 지원할 예정임.
 - 유럽은행감독청(EBA)은 은행이 보유한 주변부 국가의 국채 평가액을 현재의 시장가격 수준으로 낮추자고 제안했는데 이럴 경우 은행들이 증액해야 할 자본 규모가 더 늘어나게 됨.

1) 리스본 협정은 프랑스와 네덜란드가 지난 2005년 국민투표로 EU 헌법을 부결시키자 이를 대체하기 위해 마련됨. 리스본 협정은 내부 통합을 다지고 정치 공동체로 가기 위한 '미니 헌법' 성격을 띠는 것으로 'EU 대통령'적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EU 외무장관'인 외교정책대표직 신설 등을 담고 있음.

- 민간 채권단의 그리스 국채 손실 부담의 경우 7월 21일 정상회의 때 합의된 21%로는 효과를 볼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부담률을 50~60%로 높이는 쪽으로 의견이 접근 중임.
 - 세계 450여 개 주요 민간 은행들의 협회인 국제금융연구소(IIF)는 손실률 제고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혀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전제 조건으로 그리스 경제 회복에 대한 계획 제시가 요구됨.
 - 손실률이 50% 이상으로 결정되면 감당하지 못할 은행들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10월 26일 회담 이후에도 관련 후속 대책 논의가 지속될 전망이다.
- EFSF 확대의 경우 현재 4,400억 유로인 EFSF의 가용재원을 1~2조 유로로 대폭 확대한다는 데에 회원국 간 공감대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짐.
 - 다만, 확대 방식에 대한 의견이 좁혀지지 않음.
 - ① EFSF자금을 이탈리아나 스페인 등의 국채를 매입하는 은행에 국채 액면가의 일부 보전을 보증해주거나, ② IMF가 신흥국들의 지원을 받아 유로존 채권 매입을 지원할 특별 기금을 만드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임.
- 재정통합과 규제 강화의 경우 재정건전성을 감독하고 예산 편성 등에도 일정 수준 내에서 간섭할 권한을 EU에 부여하자는 방안이 논의 중임.
 - 재정적자 기준 미달 국가를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는 요구도 대두됨.

(Wall Street Journal 10/23, Financial Times 10/24)